

# 새만금 유관기관 한자리 모여... '함께 새만금'

### 전북도·새만금개발청·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위해 역량 결집 다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9일 부안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산립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간척박물관, 전북연구원 등 등 14개 기관, 약 100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동안 유선으로만 소통했던 각 기관 참여자들이 모여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9일 부안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 용지별 추진 현황, 기반시설, 분야별 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집대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 준비를 위해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해 보았고, 정리해 놓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새삼 놀랐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 참여자들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국가

산업단지 사업 추진현황,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환경생태유지 조성사업 현황'을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등 각 기관의 현안을 발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미있었던 것으로 도 출신 새만금위원들의 특강을 들 수 있다. 박영기 민간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 현재 상황과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 활용방안을 강의했으며, 이재운 위원은 새만금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강의로 참석

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1단계 수상태양광 추진, 새만금 산단 추가조성, 새만금신항만 총사업비 변경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도 많이 남아 있다"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여기 모인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함께 해결해 나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아직도 새만금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유관기관 워크숍은 2017년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두 기관의 협업?소통 공동연수로 처음 시작했고 이후 새만금 사업 유관기관까지 확대·개최해 왔다.

워크숍은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자리잡아 왔고, 공동주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번갈아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도가 전 반적인 준비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훈 기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지역 구분방식 4급지로 개편·공제액 등 상향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전북도는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올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주택가액 인상 등에 따른 수급권 탈락을 감안,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

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재산 가액 상승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득 없이 주거용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홍보중에 있으며, 또 기존 복지대상자 중 신청가능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발굴된 대상자의 생계급여 적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정보에 취약해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집합교육

### 올해 어업인후계자 25명·우수경영인 7명 선발 후계자 5억원·우수경영인 2억원 자금 지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9일 어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선발한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 수산업경영인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에 어업인후계자 25명, 우수경영인 7명 등 총 32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했으며, 지원 분야는 어선어업 16명, 양식업 14명, 종자생산업 1명, 수산물 유통업 1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5억원 한도 내 금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은 과거 지원받은 정책자금 외에 추가로 2억원 한도 내 금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

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금은 수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어선의 건조, 개량,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양식장 부지 구입, 신축 및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경제 또는 공매에 의한 어업기반 및 장비 등의 구입도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시 유의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구비서류와 절차 안내 △항후 수산업을 경영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허가 및 농지전용신고 절차△시설기준 △어선거래 △농신보 이용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2년 연속 감소

### 작년 대비 감소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최대 확보 유력 도·시군, 지속 감축·자원순환 환경조성에 역량 집중키로

전북도는 2022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실적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소각·매립량이 감소하여, 최고 수준(36억~37억도, 2024년 교부예정)의 교부금 확보가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매립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법정 부담금으로, 지난해 법개정(2022.3.1.)을 통해 전년 대비 처분실적 증감에 따라 납부액의 50~90%를 차등 교부 방식으로 변경돼 지속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3월부터 폐기

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14개 시군의 2022년 처분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33만4,155톤이 처분됐으며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고 수준(90%)의 교부금 확보가 유력하다.

이는 차등 교부 방식이 적용된 첫째부터 2년 연속 소각·매립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지속적 감소와 예년대비 약 8억원의 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긍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우리도 생활폐기물 감소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실천으로 달성한 결과"라며,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도와 시군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취약지역 분리배출 기반 구축 등 소각·매립량의 지속 감소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조성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처분실적 감소 결과는 향후 전라북도 자원순환 분야 정책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 27일 부처님 오신날 대비 화재 안전조사

### 도내 전통신찰 29곳 대상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7일 석가탄신일을 대비해 도내 전통신찰 2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석가탄신일 전후에는 불축행사에 따른 연등 설치로 인한 촛불·전기·가스 등 화기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다. 또 목조건축물인 전통신찰은 화재에 취약한데다 대부분 산림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산불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옥외소화전 및 방수총 등 사찰 내 설치된 소방시설 점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및 소방훈련 실시 여부 점검 △사찰 주변 금연 안내포지판 설치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실시한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석가탄신

일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사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등, 촛불 등 화기취급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2020~2023) 전북에서는 총 5건의 사찰화재가 발생해 18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뉴스

# 챗지피티 활용 연구모임 2차 특강 진행

전북도는 9일 도청 전산교육장에서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챗지피티(ChatGPT) 활용 연구모임 2차 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 과제도 본부장을 특별강사로 초청해 챗지피티를 활용한 업무 혁신방안과 챗지피티 활용 시에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챗지피티를 활용한 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성능이 개선된 챗지피티4.0에 대한 실국별 유료계정 발급과 전 청원로의 이용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AD)모델(네이버 서치GPT, 카카오 Ko챗)과 연계한 관광, 복지 등 분야별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 광고 제2023-558호

## 울치천(춘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안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및 토지출입 공고

울치천(춘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금지)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며, 같은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사해 등은 연락기간 내에 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1) 사업의 목적: 주택 및 농경지, 농경지 원수 예방 및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 2) 사업의 종류: 지방하천 정비(지방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등)
  - 3) 사업의 명칭: 울치천(춘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 4) 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5) 사업의 시행시의 위치 및 규모

사 업 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비 고
울치천(춘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일원	제방보강 L=1,719.7m 교량 2개소 낙차공 7개소 배수구조물 9개소	전라북도	

-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전라북도(전라북도 원주시 완신군 호차도 225, 전라북도청)

2. 열람기간 및 의견 제출 장소
  - 1) 열람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기한: 2023년 4월 20일 ~ 5월 19일
  -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장수군청 안전계 단과 하천팀
  - 3) 열람내용: 설계도서 및 사업관련 서류 등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불용팀 관리자(☎063-288-3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명세: 불명 함

2023년 4월 20일 장수군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